

종합·해설

선관위 '석폐율제' 도입 선거법 개정 추진

호남 한나라, 영남 민주 당선 쉽게

여야 공감대…내년 총선 도입 가능성 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여야 원내대표에게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석폐율(惜敗率)' 제도의 도입을 건의함에 따라 차기 총선에서의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석폐율제는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영남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나을 수 있게 만드는 제도라는 점에서 여야는 물론 민심의 흐름도 긍정적이어서 차기 총선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중앙선관위의 개정 의견서에 제시된 석폐율제는 현행 정당별 비례대표 명부에 지역구 출마자를 이중 등록할 수 있게 하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가 각각 취약지역인 호남과 영남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현행 비례대표 정수(54명)는 유지하면서 각 정당이 지역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석폐율 후보(이중 등록 후보)의 숫자나 명부 순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이 이뤄진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최소한 호남과 영남에 각각 3명 이상의 석폐율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에 배정할 것으로 정착되어 차기 총선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무늬만 호남'인 인사보다는 지역에서 활동 폭이 넓은 인사들이 지역구 공천을 받아 선거에 패배할 경우,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정현 의원과 정용화 전 청와대 비서관,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의 이

름이 거론되고 있다.

여야 등 정치권은 석폐율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나경원, 정동준,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이 이미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와 석폐율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정개특위 위원들도 석폐율 및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정치가 지역 갑경을 부추긴다. 영남에서 애당 국회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도 여당 국회의원이 나오도록 선거법을 바꿨으면 한다"고 밝혀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민주당도 입장은 마찬가지. 석폐율 제도가 지역구 완화에 효과가 있는데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방향과 일맥 상통하다는 점에서 도입에 찬

성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는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폐율 제도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석폐율제 도입과 관련,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역적으로 고른 정당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역 구도 완화의 효과도 있어 다음 총선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영택 민주당 대변인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상황에서 석폐율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석폐율(惜敗率) 제도=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당선시키는 제도.



"야권연대 통큰 양보 하겠다"

민주 손학규대표…순천 보선 공천 장기화

민주당이 4·27 재보선 순천 공천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손학규 대표가 20일 야권의 연합공천 문제와 관련,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고 통큰 양보를 하겠다. 이를 통해 내가 야권연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 대표의 한 측근은 이날 손 대표의 발언을 이 같이 전하고 밤 늦게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측근은 그러나 "손 대표가 구체적인 지역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원칙적인 얘기만 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순천이나 김해를 양보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4·27 재보선 공천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야권연대 논의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민주당의 순천 공천 논의

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날 "야권연대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심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순천 공천은 논의를 시작하기 조차 힘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민노당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순천지역 공천을 포기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지도부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또 민노당에 순천지역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현재 거론되는 민노당 후보가 승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도부의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 민노당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유력인사를 순천으로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인정할 정도의 명망가를 공천할 경우 민주당 내 무공천에 대한 반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에 따른 여야 간의 갈등으로 문을 닫았던 국회가 18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면서 두 달여만에 정상화됐다. 국회는 오는 3월 2일까지 1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이상훈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실시한 뒤 3월 3일부터 열흘간 3월 임시국회를 재소집. 행정 법안들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18일 오후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위)과 민주당 의원들.

/연합뉴스

**제 1 회
장흥해운 – 오리칸트리클럽
오렌지 굿샷 골프대회**

행사일시	2011년 3월 15일 ~ 16일(1박2일)
대회장소	오리칸트리클럽
참가규모	120명(선착순 마감)
참가자격	아마추어 골프인 누구나
참가비용	299,000원

주최 (주)장흥해운 오리칸트리클럽
후원 제주그랜드호텔 주관 오리칸트리클럽
예약문의 장흥해운 공식 협력사

C 골프대회
• 시상 내용 : 트로피, 부상 및 시상고급골프용품, 제주그랜드호텔 숙박권, 오리C.C 이용권, 오렌지호 이용권 등
• 포함 내 역 : 오렌지호 융복승선권, 제주그랜드호텔(1급) 백, 조식, 만찬 코스요리, 그린비(36홀), 참기념품
• 불포함내역 : 오렌지호 차량선적비, 전동카, 캐디피, 개인경비
※ 골프대회 참가자 오렌지호 차량 우선선적 ※ 성선포항-제주그랜드호텔-오리칸트리클럽 무로셔틀버스 운행

T 예약문의
대아여행사 02) 515-6318 그린여행사 061) 243-3344
정남진투어 1577-7616 헬로우제주 1644-0640
나선항공여행사 062) 523-9090 나선항공여행사 062) 523-9090
클립모두 062) 228-8004 오리칸트리클럽/제주그랜드호텔/오리관광 064) 747-4900

■ 사업자등록번호 616-81-01970 ■ 관광사업자등록번호 서울 142호 ■ 통신비밀번호 제2009-제주연통-005호 ■ 본 품의 예약 및 판매는 오리관광의 책임之下에 제공됩니다.

"제주로 가는 가장 빠른 뱃길" 초쾌속 오렌지호와 함께하는 제주여행

(주)장흥해운
www.jhferry.com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Gwangshin University
학부 학부 062) 605-11114
문의 대학원 062) 605-11115

여러분 지금 투표(전화, 인터넷)에 참여합시다.
대한민국 보물섬 JEJU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번호 034-20-334-709-01(제주수산면03771)
투표기간 2009.7. ~ 2011.11.

외교통상부 비밀 외교문서 공개

美 “北 오픈 않게 하라” 中에 요청

미국이 19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북한이 한국 상황을 오판해 도발하지 않도록 중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가 21일 공개한 1980년도 외교문서에 따르면 에드먼드

머스키 당시 미 국무장관은 5월 22

점을 소련 측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문서는 전했다.

아울러 미측은 한국에 공중조기 경보통제기(AWACS)를 증파하는 등 모든 정보기관의 활동을 동원해 북한의 동향을 주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美 “DJ 처형땐 한미관계 끝” 압박

日정부도 “北과 교류 확대 하겠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1980년 사형을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명을 위해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던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외교통상부가 이날 공개한 비밀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은 1980년 10월 3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만약 김대중이 처형당하면 한미 관계는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하면 주한 미 대사를 소환하고, 미 수출입은행 차관을 포함한 경제 협력을 유보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8월 28일 열린 하원 외교위 공개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한국에 대한 차관 제공 중단을 행정부에 건의했으며, 리처드 홀브루크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는 "김대중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미국이 피난처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이어 8800만 달러 상당의 항공기 부품을 한국에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냈으며, 미 국무부도 김대중 사형을 짐행할 경우 한국과의 유관 사업을 '파열'시키겠다는 내용의 결의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미 국무부에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공개적인 논평을 삼가달라'고 요청했으며, 미 유력 언론에 계엄 사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기사 게재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무부(는 일본 주재 공관에 김대중 구명 시위 및 집회를 적극 저지하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각 공관은 만단과 기자 등을 동원해 '김빼기 작전'과 '맞불 시위' 등을 조작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김 전 대통령

교민과 유학생, 간호사,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것이 정부나 공관에 대한 불신으로 표출됐다고 외교문서는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항쟁 직후 獨서 反韓시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독일에서 반한(反韓) 시위가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주 독일대사관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독일 현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각종 미디어가 광주 사태를 칼보디아나 베트남 사태처럼 취급하면서 '광주사태는 군부가 조작 분위기를 조성했다' 등의 주요 도시에서 열렸다.

시위 참석자들은 주로 광주에 연고가 있는 한인이었으며, 이를 주도한 사람들은 민족주의자였으며, 이를 주도한 사람들은 민족주의자였다.

또 독일에 살고 있던 호남 출신